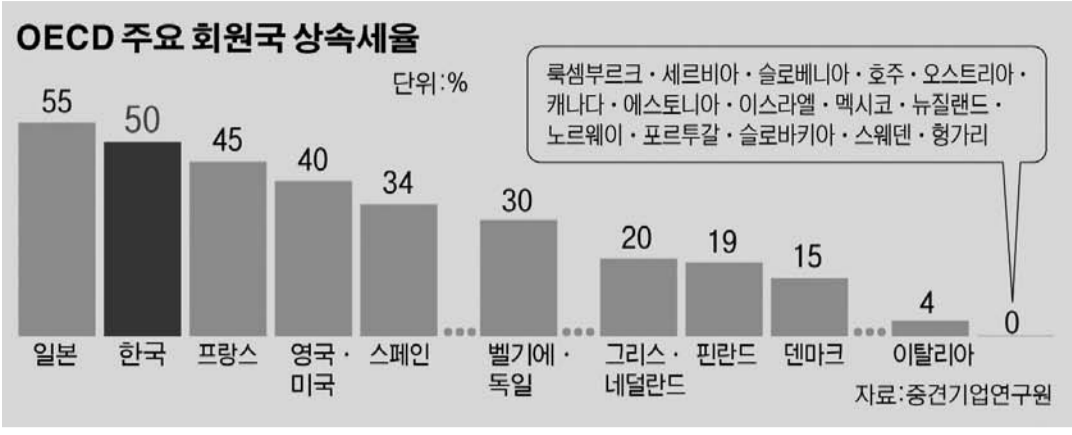


“상속세 때문에...” 승계 업무 못내는 중견·중소기업

91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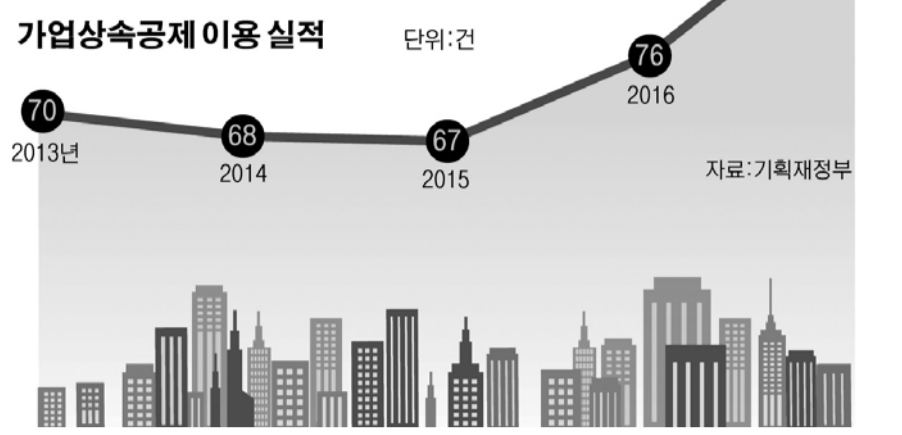


주요국 실효세율

※2017년 기준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	독일 (100만유로)	미국 (100만달러)
과세표준	8억6510만	1558만	23만	83만
납부세액	2억430만	201만	5만	19만
실효세율(%)	28.09	12.95	21.58	23.86

자료: 각국국세청



CEO 4명 중 1명 60대 이상 자녀 승계 계획 3.5% 불과

“차등세율 구간 확대로 탈세 막고 중기 지원해야”

대기업에 섬유 원단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박모(72) 대표는 요즘 부쩍 자책하는 일이 많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 넣을 게 아니라,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샀어야 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자책하는 근본적 원인은 상속세에 있다. 1980년대 초 사업에 뛰어들어 회사를 연 매출 50억~60억원대로 건설하게 되었지만, 장성한 아들들에게 물려주기에는 1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두 아들 역시 상속세와 업종 등 때문에 회사를 물려받는데 시큰둥하다. 박 대표는 경쟁사는 사모펀드든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사를 팔 생각이다. 1970~80년대 고성장에 회사를 세운 창업자들이 60~70대로 접어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대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세대교체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율의 상속·증여세 벽에 막혀 기업 승계를 업무도 못 내거나, 회사를 팔려는 중소·중견기업인이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 낮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때문이다. 한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내놓은 ‘기업생명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활동 중인 기업 중 60대 이상이 CEO를 맡고 있는 기업 수는 139만 8364개로 전체 활동 기업 중 23.11%에 달

했다. 2012년 같은 조사 때보다 기업 수는 29만5277개, 비중은 2.52%포인트 커졌다.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서는 창업자가 CEO인 국내 기업 5만1256개 중 33.2% (1만7021개)의 CEO 연령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잠재적 승계 수요가 있는 기업이 전체의 20~30%에 이른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창업자들은 아직 승계 방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승계’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CEO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69.5%)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승계할 때 최고세를

과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65%(명목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효세율로 따져도 28.09%로 미국(23.86%)·독일(21.58%)·일본(12.95%) 등보다 높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것은 부의 집중화와 대물림을 방지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가 폐업 등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을 정전을 저해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한국보다 앞서 ‘대폐업 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2025년 전체 중소기업의 60%인 245만개 기업의 CEO가 70세가 넘을 전망이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27만개 회사가 후계자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방지하면 2025년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해 약 65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22조엔(약 238조원)의 국내 총생산(GDP)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자 세대교체를 앞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국내 산업 가치사슬의 중추를 맡고 있는 중견기업(3년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346개 중

237개(68.5%)의 CEO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기업승계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1세대 기업 3개 중 하나는 10년 안에 세대교체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폐업·매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30년 이상 기업의 자산·매출·고용은 10년 미만 기업의 4~5배 규모라 기업의 영속성이 단절되면 국가 경제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속·증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한편 산업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기업 상속공제제도의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난해 특례를 도입해 10년간 비상장 중소기업 공제 금액을 자산의 8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549만 달러(약 63억원)에서 1120만 달러(약 128억원)로 올렸다. 독일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가업 경영 횡수나 상속자의 종사 기간 등 상속 공제 조건이 느슨하다. 스웨덴·오스트리아·노르웨이·포르투갈·멕시코 등은 2000년대 들

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한국도 상속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있다. 다만 매출·자산 규모와 최대주주 지분, 업종, 피상속인 10년 경영 등 요건이 까다롭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27.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91건, 공제액은 2226억원에 불과했다. 홍성규 가우다IPS 세무총괄 대표는 “경영자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미 소득세·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상속세는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1999년 만들어 지나치게 낡다”며 “차등 세율 구간을 확대해 일부 대기업의 탈세와 불법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미국처럼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중앙일보 기자 neo3@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북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농협, 출산장려 ‘I(아이)든든 예·적금’ 출시

예·적금 가입자 금리 우대 혜택 9월2일까지 골드바 등 추첨 행사

농협상호금융이 50주년을 맞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I(아이)든든 예·적금’을 지난 2일 출시했다.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이날 각각 하남농협과 삼향농협에서 1호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든든 예금은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임신부 고객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 가입의 경우 판매수익 중 일부는 출산장려기금으로 적립된다. 9월 출시 예정인 ‘아이든든 적금’은 임신부 전용상품으로, 1년 동안 6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에 대해 기본금리 외에 최고 0.7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이 중 0.5%는 별도 조건 없이 가입



‘아이든든 예금’ 1호 가입자 박지숙(가운데)씨와 김석기(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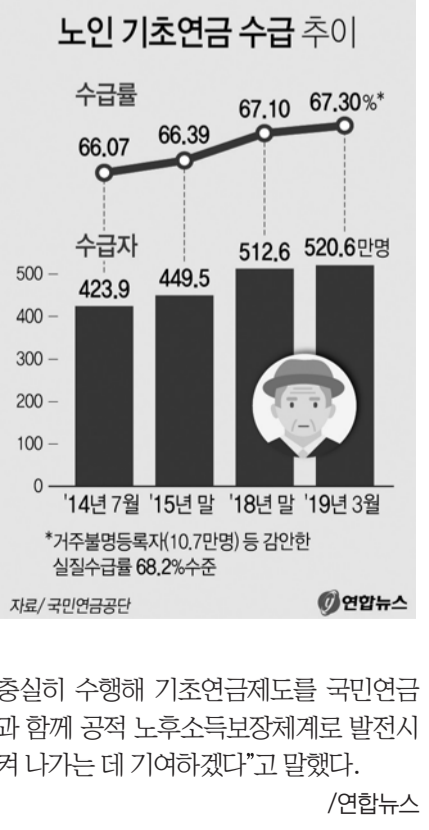
자 전원에게 제공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오는 9월2일까지 아이든든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10명에게 ‘골드바’, ‘NH포인트’ 등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초연금 시행 5년...65세 이상 수급자 520만명 돌파

수급률 67%...정부 목표치 미달 제도 안내 등 수급자 발굴 나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5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3월 현재 520만6182명으로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될 당시 423만8547명에 비해 22.8%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40만~50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새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거주불명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찾아보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